

‘광주호 독 높이기’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



한국농어촌공사가 주최한 '광주호 농업용 저수지 독 높이기 사업 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지난 31일 광주 북구 광주농협 충효지점 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환경·문화재’ 파괴 즉각 중단하라

호수생태원 방수제 만들려면 그냥 뒤라 주민·시민단체·패널 반대 목소리 높아 농어촌공사 “환경 훼손 등 최소화 하겠다”

지난 31일 광주농협 충효지점 2층 회의실에서 열린 ‘광주호 독 높이기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관련 공청회장.
충효동 주민과 시민단체, 교수 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는 열띤 분위기 속에 광주호 독높이기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패널들은 한국농어촌공사의 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의 부실(광주일보 5월 31일자 1·3면)을 지적하면서 시가(詩歌)문화원 보존을 위해 독 높이기 사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전덕영 전남대 교수는 “상충되는 ‘수자원 확보’와 ‘문화재 보존’ 가치중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 문화재를 예외시키고 있는 환경, 문화재 배경들이 문화재 가치를 높여준다. 시가(詩歌)문화권이 수몰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도 된다는 논리는 건강부회(牽強附會)”라고 말했다.
이어 전 교수는 “문화재에 대한 환경영향 검토가 잘못됐다. 가장 단순한 형태의 환경영향 평가밖에 하지 않았다. 일정부분의 결함기식으로만 패 있어 조금더 진중하고 깊이 있는

문화재 관련성을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임낙영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무등산권 광주호 시가문화원은 현재 광주·전남의 대표적인 역사 문화 관광자원이다. 광주호 독높이기 사업은 광주호 주변의 역사문화 자원과 경관가치를 현저히 파괴 훼손할 우려가 있다. 실시설계와 요식행위에 불과한 환경영향평가를 즉각 중단하고 사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호수생태원에 500m 길이의 방수제를 만들려면 그냥 두는 것이 낫다. 독높이기 사업이 아닌 수문 교체와 댐 보강, 취수시설 등 광주댐 시설 보완 사업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중현 충효동 통장은 생활하수와 토지오염 문제 등을 지적하며 “호수생태원 조성시 배수로를 잘못 설계해 많은 비가 오면 마을앞 도로와 상가가 침수된다.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는 광주호 독높이기 사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홍수를 조절하는 저류(貯留)기능이 없

때문에 추가 저수량 확보를 위한 독 높이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환경단체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최안일 차장은 “광주호 독높이기 사업은 홍수와 가뭄 피해를 예방하고 저수량 및 환경유지 용수 등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지난 2002년 태풍 ‘루사’이후 국가의 설계기준이 바뀌었다. 자연지형 감

소, 비산먼지·토사유출 발생 등 부정적 영향에 대해 개발계획과 입지여건을 감안해 적절한 저감대책을 수립해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오는 8월 초까지 ‘광주호 독높이기 사업’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9월에 시공사를 발주한 뒤 11월 중순께 공사에 착수해 2012년 12월말에 완공할 예정이다./송기통기자 song@kwangju.co.kr



청와대 저축銀 비리 정면충돌 민주당

“민주당 핵심 인사가 “정부·민정수석·기획실장 보해저축銀 구멍 로비” 로비 연결 고리 3인방”

저축은행 로비 의혹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민주당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이 청와대 핵심 인사들의 저축은행 비리 연루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에 맞서 청와대가 민주당의 보해저축은행 로비 가담설 등을 제기하며 역공에 나섰다. 민주당과 청와대 모두 저축은행 로비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진다면 도덕성에 치명적 상처를 입는 것은 물론 총선과 대선을 앞둔 향후 정국에 최대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역공 나선 청와대=청와대는 지난 31일 민주당이 오히려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막기 위해 로비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민주당 한 당직자가 지역구내 부실 저축은행을 구명하려는 민원을 해왔으며 관련 서류까지 전달했다”며 “당시 이 은행은 금융당국으로부터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를 맞추라고 요구받았으나 500억원 가량을 증자할 능력이 없으니 BIS 적용을 완화해달라는 게 청탁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저축은행을 전면적으로 점검하는 것인데 특정 은행만 제외하는 게 말이 되느냐’ 거절했다”며 “민주당 측에서 로비를 시도한 저축은행은 목표에 위치한 ‘보해저축은행’”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한,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의 저축은행 로비 연루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 이용섭 대변인, 박선숙 의원을 거명하며 “이들이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기본적인 사실 관계조차 맞지 않은 음해를 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총공세 나선 민주당= 민주당은 저축은행 로비 연루 의혹과 관련, 정진석 정무수석에 이어 권재진 민정수석, 김두우 기획관실장까지 거론하며 ‘권력형 게이트’로 몰아붙이고 있다.
지난 31일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부산저축은행 관련 로비의 연결고리로 김두우 청와대

기획관실장을 지목했다.
전날에는 김진표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은 전 감사위원이 권재진 수석에게 구멍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있다”며 권 수석을 겨냥하기도 했다.
박선숙 의원은 이날 “이 모든 논쟁의 최종적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다”며 “정부가 저축은행 문제를 뻔히 알고서도 부실 저축은행까지 합법시키며 부실을 더 키웠다”고 주장했다.
당 저축은행 진상조사TF 위원장인 박지원 민주당 전 원내대표도 보해저축은행 로비에 나섰다는 청와대의 주장에 대해 ‘조작 및 음해’라며 정면 반박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보해저축은행 문제와 관련해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수차례 통화를 했지만 이는 보해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이후 상황을 금융당국에 확인하고 피해보전 대책을 논의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박 전 원내대표는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과 정진석 수석의 관계에 대해 “두 사람의 관계는 우정힐스 골프장이나 청담동 한정식 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저축은행 사태 관련 로비스트 박태규씨는 현재 청와대에 있는 2명, 정부의 핵심인사 1명과 막역한 관계”라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트위터에도 3개의 글을 잇따라 올라 정 수석에 대해 “변명이 더 큰 의혹을 불러온다”며 “청와대, 저와 한번 하자는 것일까”라고 반문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저축은 비리 잇단 의혹 제기에 감사원 “악의적 흔들기” 반발

감사원은 지난 31일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관련한 검찰 수사 및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악의적인 감사원 흔들기”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감사원은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수뢰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만 해도 “감사원의 독립성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자성모드’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 다른 감사위원의 연루설이 제기되고, 일부 언론을 통해 배극관 감사위원이 감사 대상 비위 업체측과 접촉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처럼 강하게 반발했다.

배 위원은 이날 “비위 업체측 인사를 만났다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도됐지만, 감사위원은 피감사인이 아닌 변호인은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실시된 서울메트로(1~4호선)에 대한 감사의 주심 감사위원을 맡았었다. 일부 언론은 그가 비위 사실이 적발된 업체측 법률대리인 이모 변호사와 감사 기간에 여러 차례 접촉하고 저녁 식사도 함께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배 위원은 “지난해 11, 12월께 이 변호사를 두차례 만난 바 있다”며

“메트로 감사의 주심으로서 감사를 진행한 사무처 이외에 피감기관 변호인과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감기관이 아니라 변호인을 만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이런 것을 의혹으로 보도한 것은 악의적인 감사원 흔들기”라고 주장했다.
또 감사결과와 자료를 해당 변호인측에 팩스로 전달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메트로에 대한 감사 결과는 지난 1월 3일 시행되고 같은 달 28일 인터넷에 공개됐다”며 “지난 3월 17일에 이 변호사가 보좌관에게 자료를 달라고 해서 공개가 됐으면 보내라고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감사위원도 “사무처가 검사라면 감사위원은 판사의 역할을 하는 만큼 (이해당사자측의) 이야기는 들어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연합뉴스